

# 건강한 미디어 · 온라인 환경 조성(관계부처 합동)

## 1. 현황 및 문제점

- 연예인 자살 시 심리적 동조, 자살수단 모방 등 ‘베르테르 증후군’ 발생으로 일반인 자살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
  - \* '23.12월 A씨 자살 직후 2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자살사망자 수 **25.8% 증가**(2,079명→2,616명), 동일수단(가스중독) 자살사망자 수 **108.6% 증가**(395명→824명)<'23년, '24년 1~2월 합산 비교>
- 모방 자살을 유발하는 선정적·구체적 언론보도\*가 지속되고 있으며,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\*\*도 증가 추세
  - \* 언론 자율심의기구 주의·경고건수 : ('23년) 564건 → ('24) 763건 → ('25) 1,024건
  - \*\* 생명존중희망재단 신고건수 : ('23년) 303,636 건 → ('24) 401,229건 → ('25) 603,383건
-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온라인 매체\*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식별·평가 및 대응 역량은 부족
  - \*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95.1%, 하루 평균 3.3시간 이용, 미디어 교육 경험률 53.7% (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)

## 2. 추진과제(안)

### ① [생산] 책임있는 미디어 ·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

◆ 자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보도 및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

#### □ 자살예방 보도준칙 실효성 제고 경찰청·문체부·복지부

- (언론보도 현장 관리 강화) 일선 형사과장 대상 보도준칙 및 표준 질의·응답 등 포함 언론대응지침\* 배포 및 교육 실시('26.6) 경찰청
- \* 최초 응대한 형사과장이 보도지침 위반 기자에게 피드백 전달 등 조치 철저
- 특히 ①유명인 자살, ②일가족 사망(가족 살해 후 자살 포함), ③청소년 자살 등에 대해서는 언론사 대상 보도 자제 당부
- 시도청 홍보 기능 중심 기자간담회 등 활용, 위반사례 공유 및 협조
- ※ 6. 25. 전국 홍보기능 지휘부 워크숍, '자살예방 보도준칙' 준수사항 재교육 및 이행 강조

○ **(언론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)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하여 자살 예방 보도준칙\* 실효성 강화**(‘27~) <sup>문체부</sup>

\* 언론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,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(보건복지부·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·한국기자협회)

- **(위반매체 공개) 매체별 위반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누리집 및 소식지를 통해 공개**

※ (위반건수) ▲신문윤리위: 450건(‘24) → 701건(‘25) → 235건(‘26.6),  
▲인터넷신문윤리위: 313건(‘24) → 323건(‘25) → 126건(‘26.6)

- **(제재기준 강화) 매체별 위반건수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제재를 한 단계 상향하여 부과**

\* 신문윤리위원회 제재기준 : 주의, 경고, 공개경고, 정정, 사과, 과징금

- **(지원사업 연계) 연 위반건수가 일정 횟수 이상인 매체의 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검토**

\* **(현재)** 자율심의 서약 참여 여부 및 심의결과를 지원사업 가점으로 부과(최대 8점) →  
**(개선)** 자율심의 서약 참여 여부 및 심의결과를 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에 반영

- **(점검시스템 개발) 언론사 기사 작성 시 보도준칙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‘AI 기반 자살예방 보도준칙 점검시스템’ 개발**(‘26.말, 언론재단)

○ **(자살사건 보도기자 POOL 운영) 자살예방 보도준칙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한 기자를 인력풀\*로 관리**(‘26~) <sup>복지부</sup>

\* 신입기자교육 강사, 자살예방세미나 토론자 등으로 참여

- 언론사·데스크 협업 통해 유명인·연예인 등 주요 자살 사건은 자살예방 보도준칙 교육 이수 기자가 취재·보도하는 보도 관행 형성 추진(‘27~)

□ **영상콘텐츠의 자살 묘사 개선** <sup>문체부·방미통위</sup>

○ **(OTT 등급분류 사후관리 강화) OTT 사업자의 영화·드라마 등 자체등급분류 적정성(모방위험 고려 여부)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\* 강화** <sup>문체부</sup>

\* 등급조정요구, 직권등급재분류, 등급분류결정취소 등 조치(영상물등급위원회)

※ 등급분류 기준 7가지 요소: 모방위험(자살·자해 등), 주제, 선정성, 폭력성, 대사, 공포, 약물

- **(방송심의 강화)** 방미심위 방송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의규정 엄격 적용<sup>방미통위</sup>
  - 자살 관련 방법, 도구 등을 자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, 자살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등의 방송내용에 대해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
  -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미심위·방송사 심의책임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현안, 심의사례 및 관련 심의규정 공유('26.6~)
- \* 자살묘사 관련 심의 현황: 총 9건(권고 5건/의견제시 4건, 2021년~2025년)

## □ 언론인·콘텐츠 제작자 인식 제고<sup>문체부</sup>

- **(언론인 교육 확대)** 언론인 경력주기별 자살보도 윤리교육 확대('26~)
  - (신입) 수습기자(1년 미만) 자살보도 윤리교육 확대(연 11회 → 15회)
    - \* 언론진흥재단과 생명존중희망재단 협업으로 '자살예방 보도준칙'에 대한 사례 강의 진행
  - (중견) 중견 언론인(차장급) 교육 지원사업\* 참여 대학원(2개교)과 협력하여 교육 내용에 자살보도 윤리교육 의무 포함
    - \* 언론인 대상 석·박사과정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원 지원('25년 57명 지원)
  - (간부) 경력기자 교육에 편집책임자 및 임원 등 간부까지 포함하고 횟수 확대(연 5회 → 10회)
- **(콘텐츠제작자 인식 제고)** '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'이 제작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·확산 추진('26~)
  - \* 제작지원작 대상 제작사에 가이드라인 배포 및 준수 권고(드라마제작사협회·영상제작사협회 협력)
  - 영화·영상 콘텐츠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신진·기성 콘텐츠 제작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실시('27~)
- **(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)** 기자협회, 자율심의기구, 언론재단,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'미디어 환경 개선 방안 협의회' 운영('25.11~, 분기별)
  - 자살예방 보도준칙 개정방안\*,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 논의
    - \* '자살보도 개선방안 연구' 추진 중('26.2~11, 한국방송학회)

## 2 [유통] 온라인 플랫폼의 모방 자살 확산 방지

### ◆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및 혐오표현 근절

#### □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조치 복지부·과기정통부

- (AI 활용 상시 모니터링) 자살 자극에 취약한 대상자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유발정보를 「자살예방법」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및 조치 복지부·과기정통부
  - \* 제19조(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) ① 누구든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솔루션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신속 대응 추진(기획처 및 재정부 협의 중)
    - \* 기존 전담인력, 국민모니터링단 → 개선 AI 24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/적용
- (위법성 고지 강화) 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위법성 및 조치사항을 고지 하도록 정보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('26.11~, 인터넷자율정책기구·공정위 협력) 복지부
- (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작)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정보통신 사업자의 협력사항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('26.11~) 복지부

#### □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 방미통위

- (신속심의·차단) SNS, 인터넷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 요청 등 유해정보 확산 방지 지원
  - ①방미심위 서면심의(24시간) 대상 확대\*, ②신속한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'긴급조치권' 도입\*\* 추진, ③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불법정보 등에 대해 신속조치 협조 요청
- \* 기존 디지털 성범죄물 → 개선 자살 유발 등 불법정보로 확대('26.2.19.「방미통위법」 개정 시행)
- \*\* 복지부 등 소관기관 요청시, 방미심위 심의 전이라도 방미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 가능('26.2.27.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안 발의, 김현 의원 대표발의)

#### □ 자살유발정보 신고 신속 대응 경찰청

- (수사 철저) 악의적·수익 목적 자살유발정보는 피의자 추적·검거를 위해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부서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('26.6~)

- **(자살위험자 보호)** 출석요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, 자살예방센터(지방정부) 안내 및 연계

## □ 온라인상 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 방미통위

- **(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)**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'혐오·차별표현\*'을 '불법정보'에 포함하고, 허위조작정보 요건\*\*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('26.7.7. 시행)

\* 공공연하게 인종·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·집단에 대한 증오심 선동하는 정보

### \*\* <허위조작정보 요건(정보통신망법)>

✓ 제44조의7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허위조작정보"라 한다)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.

1.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(이하 "허위정보"라 한다)
2.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(이하 "조작정보"라 한다)

- '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\*'에게 자사 플랫폼에 대한 자발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, 불법·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과징금, 가중손해배상 등 제재 규정\*\*을 강화·시행

\*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자는 자

\*\* ① 직전 3개월 간 3건 이상 게시, ② 관련 수익 발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게재자 대상

## ③ [보호] 고위험군 이용자 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

### ◆ 자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중심의 디지털 문화 조성

## □ 자살위기 시 대처방법 및 도움정보 확산 복지부

- **(공익광고 제작·송출)**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(자살원인)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여 상황별 대처방법 및 도움기관 정보\* 전달 효과 극대화('26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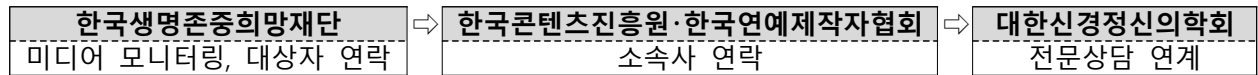
- 연령대별 매체활용을 감안하여 디지털 영상 광고(유튜브, 인스타그램), 디지털 이미지 광고(네이버 배너 광고), 공중파TV, 전광판 등을 활용한 노출 확대

\* 예) 청소년(위클래스), 청년(109상담전화), 중장년(자살예방센터)

- **(도움기관 홍보 확산)**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별 정보제공 포스터(부채·일자리·정신건강 등) 배포('26~)

\* 지자체 자살예방센터(정신건강복지센터), LH,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배포

- **(고위험군 집중관리)** 연예인 SNS 게재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견, 전문상담 연계 등 체계적 위기 대응('26~)



- 연예인 자살 시 언론·기자단에 보도준칙 준수 협조 요청

## □ 생명존중 및 디지털 윤리 교육 확대 문체부·방미통위

- **(청소년)** SNS·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**분별력 강화**를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\*에 자살 예방 교육 연계 추진 문체부

-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,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 및 교사 대상 자살 예방 연수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·배포 추진('26.10~)

\*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분별있는 정보 접근 및 이용능력, 뉴스의 비판적 이해 등

※ 중고생의 85% 이상 SNS 사용하며(성평등부 2024), 청소년의 13.5%는 스마트폰 장기간 사용·몰입 후 우울감 혹은 무기력 호소(과기부 2025)

- **(대국민)**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교육을 통해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의 위험성,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및 올바른 대응방법 등 자살유발 정보 생성·유통 예방·대응 교육 추진('27~) 방미통위

※ 자살유발정보의 유형, 관련 법·제도, 신고·차단 절차 등을 디지털윤리교육 콘텐츠에 반영하여 학교, 관련 기관 및 온라인을 통해 보급('27.9월~)

- 디지털윤리 콘텐츠 공모전, 디지털윤리 주간, 디지털 윤리대전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

## □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공감·회복 메시지 확산 문체부

- **(종교계 생명존중문화 조성)**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, 상담, 자살유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종교계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

※ 정부-종교계(불교·개신교·천주교·원불교 등) 협약 체결('25.11.24.) 및 공동선언문 발표('26.3.13.)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(불교·개신교·천주교 등 7대 종단) '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' 캠페인 개최('26.6.14)

- **(위로 메시지 확산)**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(연예인 등)의 다양한 서사와 버팀을 도운 음악들을 공유,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고 마음의 회복을 도모

- 방송 협업 버팀곡 109개(자살예방상담전화) 수집 및 확산 프로그램 제작

※ (프로그램명) 오늘을 버틴 노래 플레이 리스트 '109' (MBC '26.7.21~9.8)